

학술운동의 현황과 전망

김동춘*

1. 머리말

운동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학술운동 혹은 과학운동이라는 개념¹⁾ 최근 한국사회의 젊은연구자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학문사회의 내·외부에서는 ‘학술운동, 과학운동이 성립가능한가?’라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의 논거는 학문, 과학활동은 학자, 지식인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조직적, 물적 토대를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사회의 연구자의 동향은 이들의 의혹을 불식할 만한 많은 구체적 사실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학문활동은 오로지 개인적 자각과 실천의 문제이며, 학자의 도덕적 결단의 문제일 따름’이라는 이들의 기존의 신념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현상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학자 지식인의 실천의 과제가 더 이상 자기 개인의 양심과 도덕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구조적 제 모순이 이러한 현상의 저류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의 한국사회가 이전과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80년 이후의 변화란 크게 보아 생산대중 주체의, 혹은 그것을 지향하는 운동이 변혁운동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사실로 집약해 볼 수 있다. 민중

* 서울대·사회학

- 1)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 과학운동이라는 개념이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고, 해방직후 우리나라의 진보적 지식인들도 자신들의 실천을 과학운동이라 지칭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浜口晴彦, 「日本の知識人と社會運動」(時潮社, 昭和5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대학원 자치회, 「해방직후의 과학운동」을 볼것.

이 변혁운동의 주체로—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확실하게 자리잡아 나간다는 것은, 그간 의사(疑似) 주체로 행세해 온 지식인들이 민중의 주도력에 의해 새롭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식인이 개인주의적 계몽가로서 행세할 수 있는 물질 근거가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민중과의 확고한 결합과 지식인들 자신의 조직적 결합을 가능케하는 물질, 사상적 물질적 토양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상부구조 제 부문에서의 변혁의 과제가 새롭게 부각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1960년의 4.19와 그것을 통해 형성된 의식 공동체가 정치투쟁의 지형에서만 의미있는 것이었다면 1980년대의 그것은 총체적 변혁에 있어서 문화, 이데올로기, 학문, 사상 등 의식 제 영역에 관련된 것이었다.²⁾ 지식인은 민중주체의 변혁운동의 기능적 대리자로서, 그리고 민중주체의 운동의 규정력을 받는 결집력으로서 자리매김되어, 그 고유한 영역 속에서 현실과의 접촉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학술, 과학운동의 출현(?)은 거의 전적으로 학문·과학 외곽으로부터의 자극과 요청에 의한 것이며, 그것의 변화에 규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학술운동의 독자적 의의를 말살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학술운동은 근본적으로 학자, 지식인의 사회적 존재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학문사회 외부로부터의 규정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며, 따라서 학술운동의 현실태는 그 규정력에 비추어 어떠한 지점에 도달해있으며 어디까지, 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현황을 이차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술운동의 ‘운동’으로서의 발전의 가능성도 이러한 점검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학술운동의 주·객관적 조건

1) 객관적 조건

- 2) 4.19이후 60년대 학생운동의 현실인식은, 군부 독재정권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반외세 민족통일지향으로서 분단고착적 현실인식과는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주의적 현실관, 역사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생산현장을 축으로 한 계급 제 관계, 및 이들을 중심으로하는 역사발전의 전망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분단의 총체적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까지 인식이 확대되지 못했고, 이것은 60년대 말 이후 학생운동에서 반외세의식이 쇠퇴하게 된 이유이다.

학술, 과학부문에서의 제 모순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 혹은 그 속에서 이 데올로기 제 기제가 갖는 문제점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한국사회의 이론 혹은 과학이 그것에 걸맞는 내용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치·사회적 제약을 비교적 강하게 받는 인문사회과학에서 이 점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소위 한국의 주류 사회과학은 자본주의체제의 안정적인 현실위에서 생겨난 미국 사회과학의 복사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 혹은 과학’의 위세를 과시해 온 한국의 사회과학은 ‘갈등보다는 균형을, 사회의 격렬한 변동보다는 정태적 안정을, 사회성원의 가치, 이념적 균열보다는 합의’를 일면적으로 강조할 뿐더러³⁾ 그렇지 않는 입장, 방법론을 과학이 아니라고 비난해 왔다. 이러한 주류 과학은 객관성이라는 허울아래 자신과는 상이한 방법론적 지향과 세계관에 입각한 논리체계를 이데올로기라고 규정하여, 학문사회의 테두리에서 철저히 배제시켰는가하면, 실제 사회현실의 진행과정에 대한 거리감과 상대적 무관심을 정당화하기도 하였다.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기존 과학의 사이비성은 그러한 방법론, 이론이 궁극적으로 함축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 보면 금방 판명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생산관계의 개념을 사상해 온 경제학, 정치체제의 개념을 배제해 온 정치학, 계급과 혁명의 현실성을 부정해 온 사회학이 갖는 실천적 귀결은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버제한, 체제 내에서의 조정과 합리화일 따름이다. 어느 경우에도 미국과 같은 선진자본주의를 이상으로하는 발전모델이 바람직하며 그 외의 방법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결국 자본주의의 맹주인 미국과 그 대리자인 일본과의 밀접한 유대하에서 그것에 부응하는 정치, 사회체제를 유지해 가는데 필요한 이론의 재생산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객관성이라는 명분으로 현실사회에 대해 갖는 실천적 연관성을 은폐하거나, 아주 진보적인 경우(?)일지라도 ‘사회에 대한 이론의 건전한 비판’이라는 차원을 넘지 못한다. 후자의 경우에도 독자는 이름의 대중일 따름이며 그들에 대한 책임은 담보되지 못한다.

학문의 계급성, 혹은 정치·사회적 규정력이 훨씬 불분명한 자연과학에서도 이점은 예외가 아니다. 이미 서구에서도 과학이 그것이 애초에 가졌던 진보성

3) 김진균, “민족적, 민중적 학문을 제창한다.”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 (역사비평사, 1988), 17쪽.

을 상실하고 과도한 군비경쟁의 도구, 독점 자본의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략한 점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순이 증폭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산업자동화, 첨단산업의 개발 등 기술사회의 화려한 미래를 예측하는 나팔소리 뒤에는 ‘자본가들의 대외종속성이 과학·기술의 독자적 발전을 봉쇄하고 있으며, 민중의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지 못한다’⁴⁾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원자력발전문제처럼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침묵으로 일관한다’⁵⁾는 자책이 있기 때문이다.

인문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 이렇듯 과학성을 주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중심의 세계체제를 재생산해 내는 문화적 대리자로서 충실히 복무해 왔을 뿐더러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변함없이 지배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제도권 학문사회의 재생산기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한 사회내의 학문재생산의 가장 중요한 기제는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의 형성, 교수요원의 충원방식, 교과서의 편재와 내용은 곧 학문재생산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남한에서 미국식 교육이념에 충실한 엘리트층을 육성하기 위한 ‘국립서울대학안’(국대안)이 마련된 것은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훨씬 전인 1946년 6월이었으며, 많은 학생, 교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것을 관철시켜 초대 총장에 미국인을 임명하였으며 이사 3인을 미국인으로 선정하였다.⁶⁾ 이때부터 국립서울대학교는 한국의 중추적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문화적 지배를 정당화해주고 그것에 필요한 인원을 양성하는데 커다란 기능을 하였다. 미국은 미공법 402호 ‘미국정보교육교환법’에 의해 한미교환교수협정을 맺고 많은 학자들—특히 인문사회과학—을 미국에서 연수받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정당화하여 이들로 하여금(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은연중에 미국의 지배의 한국내의 파트

4) ‘과학과 인간’ 편집위원회(역음),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운동」(은누리, 1988), 179쪽.

5) 「한겨레 신문」, 1988. 11. 24.

6) 미군정은 국대안의 취지를 부족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최대한 활용, 교육의 질적 향상에서 구했으나 교수 및 학생들은 그것이 ① 학원의 관료화, ② 군정의 학원간섭, ③ 단과대학의 자주성을 박탈할 것이며 학원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말살할 것이라는 이유로 강한 거부사를 표현하였다. 이후 학원의 민주화를 부르짖는 학생운동이 약 1년간 맹렬하게 일어났다. “총장이 점령국인 미국인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식민지교육의 재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었다.”(이재오,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형성사, 1986), 91쪽.

너로 변환시켰다. 이렇게 양성된 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가? 어떤 이론이 정통적, 주류적인 이론인가?”에 대한 주어진 판단기준 하에 대학생을 교육하고, 대학원생을 양성하며, 학계를 만들어 나가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적 자문을 하는 실로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다. 현재 한국의 주요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171명 가운데 116명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나마도 국내박사는 50대 이상에 많은 실정이다.” 이것은 다른 인문사회과학분야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현상이며, 자연과학분야는 이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미국의 주류사회과학과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학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의 교과내용이 ‘선진적 지식의 학습’이라는 명분 하에 일방적으로 주입, 암송, 테스트되어 올 수 밖에 없었다. 학부나 대학원에서는 소위 주류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강좌가 무리하게 전공필수로 선정되어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대학원에서는 이러한 틀을 벗어나는 논문주제나 접근방법을 무언의 압력으로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관심과 욕구에 부응하여 교과목이 개설, 변경되지 않고 구태의연한 내용이 계속 답습되는가하면, 학생들의 관심이 계속 변하여 그들을 지도한 교수요원이 부족하거나 전연 없는데도 새로운 교수요원을 채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원래의 과목이 포괄하는 범위의 강의를 받기보다는 담당교수가 미국이나 서구에서 전공한 분야의 특정 주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학문적 재생산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대학이 미국 및 그와 결탁한 국내 지배세력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배를 영속화하는 도구로 충실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학문 및 그 재생산 기제의 이와같은 대미종속적 성격은 단순히 학문사회내의 기형성을 강화시키는데 머무르지 않고 사회전반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재생산 전체를 굴절, 왜곡시킴으로써 기존의 정치적 지배질서를 존속시켜, 사회변혁과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을 저지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었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류 학문(혹은 그 방법론)은 반공이데올로기의 논리적 표현이며 학문적 지배속에서 획득한 ‘전문성’의 권위는 헤설하는 지침으로 작용하여, 역

7) 장상환, “도전받는 미국유학 경제학박사들,” 「말」 (1988 10) 이에 관해서는 박동서, 「미국교육을 받은 한국의 엘리트」, 구영록 등, 「미국과 한국-과거, 현재, 미래」 (박영사 1983)을 볼 것.

사적 살길에 대한 한국민중들의 주체적 인식을 방해하고 혼돈에 빠뜨린다. 무엇보다 중요한 초·중등 학생들의 교과서의 내용을 지배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사회화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대중들은 자신의 현실과 잘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 이론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학문은 더욱 학자들만의 전유물로 되어간다.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실천 경험의 과정에서 재학시 배운 이론을 재학습, 실천(검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식은 오로지 취지기의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다.

이상과 같은 보편과 합리성을 내세우는 기존의 학문 및 그 재생산 방식이 그 자체의 기준에서 보거나 민중적 입지에서 보더라도 전혀 보편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비자주적이며, 예속적이라는 사실에서 학술운동의 출발점은 마련된다.

2) 주체적 조건

서구의 경우라면, 학문사회의 변혁을 위한 집단적 움직임은 주로 학부의 학생들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학생운동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 변혁운동의 선도체로서 갖는 특수한 위상때문에, 학문사회 내의 구조적 모순은 보다 전문적인 대학원생 이상의 연구자들이 보다 잘 감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단계 학술, 과학운동의 주체는 대학원생 이상의 다양한 부류의 연구자들이다.

이들이 운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일차적인 토대는 이들의 불안한 사회·경제적인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학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학의 전임교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대학의 교수를 제외한 학자의 범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산하의 연구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학술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연구자들도 국가권력의 정책을 입안하는 기능인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런 까닭에 학술연구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은 대학의 전임교수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런데, 전임교수의 자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한다. 문제

는 이 준비의 과정이 장기화될 뿐더러 그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상당한 정도로는 현행 학문사회의 재생산기구의 모순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첫째는 많은 사립대학의 경우(국립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으나) 80년대 이후 대학정원을 크게 늘렸으나, 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전임교수의 채용을 꺼려하고 있을 뿐더러 대부분의 강좌를 강사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대학교육의 질적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많은 예비학자를 퇴적시켜 이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교수요원 채용과정에서 인맥과 학맥, 금전수수등이 중요 고려사항으로 작용함으로써 몇몇 대학의 경우 학위취득을 위하여 교수의 잔심부름까지 감수해야하는 기형적인 현상도 발생하였다. 교수요원의 채용이 연구성과와 연구자질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교수의 질적저하와 학위과정생들이 불만을 가중시킨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는 교수요원 채용과정에서 기존 교수들의 구매에 맞는 소위 주류이론⁸⁾과 방법론 전공자들을 선호함으로써 결국 미국 등 서구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파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밖에 없었고, 국내의 학위취득자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더구나 생활때문에 장기간 연구, 학위논문작성에 매달리기 힘든 조건하에 있는 국내 연구자들은 학위취득마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처럼 '박사학위'를 연구역량의 징표로 간주하는 분위기에서는 사실상 탈락되기 마련인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자, 지식인의 문화적 노예근성을 강화시켜 자주적 학문의 건설에 장애요소로 등장할 뿐더러 국내 대학원의 질적 향상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것이다. 넷째는 전임 교수요원과 시간강사들 간의 보수, 사회적 대우 상의 현격한 격차를 줄이려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전자를 개량화, 체제내화시키고 후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킴과 동시에 좁은 채용의 기회를 미끼로, 후자로 하여금 열악한 조건을 감수하도록 하고 기회주의적 속성을 견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석사·박사학위 취득자들에 대한 취업의 통로를 마련하지 않은 채 대학원정원을 무리하게 늘임으로써, 이들을 실업자로 전락시키고 가능하면 연구활동을 그만둘 것을 사실상 권고한다는 점이다.

8) 여기서 주류이론이란 경제학에서 근대경제학, 사회학에서 기능주의 혹은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학, 정치학에서 형태주의를 지칭한다

대학제도내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대학의 문호를 넓힘으로써만 이들의 불만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문제의 뿌리는 학문사회의 재생산기제 전반에서 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각 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소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할당되어 지배 질서유지에 필요한 성과물을 제공받고 있으나, 그 외의 모든 학술연구단체는 사실상 거의 자생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출판사의 원고료에 의존하여 최소한의 재생산에 만족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독점기업의 커다란 연구 프로젝트는 대부분 대학으로 흘러들어가고, 제도권 외곽의 연구자들은 출판사의 적은 액수의 원고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대학 외곽에서 나름대로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학자’는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불합리성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오로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열악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연구활동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취업을 함으로써 연구활동을 포기하든지 모두가 그의 개인적 여건, 의지, 노력에 관련된 문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 조건이 학문사회의 구조적 모순 나아가서는 한국사회의 문화이데올로기구조의 근원에서 파생하는 모순이라는 사실이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감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적 활동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각이 주로 연구자가 처한 사회 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성에서만 구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재생산구조가 갖는 비민주적, 반민주적 속성을 국가부문이나 자본에 포섭되어버린 인텔리들보다 더욱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 악법과 반공이데올로기가 자유로운 지적활동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것을 일상의 연구활동 속에서 인식하고 있다. 첩애한 이데올로기의 지형이 변혁운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은 물론, 연구주체의 선택과 연구방법론의 도입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중들의 삶과는 다소 유리되어 있는 이론체계를 연구하고 발표해야만 ‘전문가’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인식민지의 현실은 학자·연구자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들—특히 제도권 외곽⁹⁾의 젊은 연구자들—이 집단적 의식으로 획득하게 된 이와같은 현실인식과 존재의 자각은 연구자운동이 활성화되는 주관적 계기를 형성해내고 있다.

3. 학술운동의 전개

학술, 과학운동은 이상과 같은 주·객관적 조건 위에서 전개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의 직접적인 추동력은 학술연구자의 존재조건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점도 부인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1960년 4.19이후의 즐기찬 반독재 민주화투쟁 속에서 추적된 지식인들의 계몽적 비판적 역할은 80년대의 지식인, 연구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가다듬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1980년 광주민주화투쟁이후 급속히 성장한 민중운동의 경험은 안일한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덕적 의무감을 부과해 주었기 때문이다.

학술운동의 사상적 기반은 이미 1970년대에 뿌려진 셈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학자들이 소개한 서구문명에 대한 비판의 이론, 네오마르크주의 이론등이 이러한 사상적 기반의 창출에 어느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민주화운동이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 흡수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⁰⁾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이나 돕(Dobb), 스위지(P.Sweezy), 바란(P. Baran) 등 서구중심적 편향을 갖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저작들이 파쇼적 유신체제를 비판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밑바침이 되기도 했다. 현실개혁의 대안을 내포적 경제발전과 민중중심의 사회발전에서 찾는 민족경제론에서 찾기도 하였다.¹¹⁾

이론은 사회비판의 논리적 전거로서의 의미는 지니고 있었으나, 한국사회의 구체적 조건에 바탕을 둔 건설적 대안이 되지는 못했고 인텔리들의 지적욕구

9) 여기서 제도권학자란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의 교수요원, 정부산하의 연구기관 종사자를 지칭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의 시간강사나 개별 집필자들을 모두 비제도권 연구자이다.

10) 밀즈, 아렌트, 프롬, 마르크제, 하버마스 등의 저작들이 많이 읽혔다.

11) 조용범교수의 「후진국 경제론」, 박헌재씨의 「민족경제이론」, 창작과 비평에 실린 전철환, 이경의씨 등의 논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의 대상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학자들은 여전히 아카데미즘의 범위를 넘어서는 실천적 지침으로 이들 이론을 소화할 능력을 결핍하고 있었고, 그것은 이들 이론 자체가 변혁운동 속에서 실천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기보다는 강단학자들의 관념의 산물인데서 크게 기인하고 있다.

1970년말 학생운동권과 몇몇 학자들에 의해 처음 읽히기 시작한 종속이론은 당시의 지식사회에 커다란 방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¹²⁾ 종속이론이 갖는 방법론적 함의나 실천상의 함의에 대해 깊이 고찰할 수 있는 역량은 없었지만, 일단 저개발국가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변혁운동의 현실에 바탕을 둔 대안이론이었다는 점에서 지식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당연했다. 따라서 종속이론의 맥락에서 접근된 도시빈민론, 생산양식접합론, 주변부자본주의론 등은 우리사회를 설명하는 준거로 활용되기도 했고, 민중운동의 지침으로 모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론적 정합성의 측면에서나 운동사적 정통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한국현실에 대한 설명력의 측면에서 종속이론이 갖는 한계는 곧 드러나게 된다. 종속이론이 충분히 검토, 발전되기 전에 급속히 퇴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80년대 초·중반 운동의 발전의 속도가 그 만큼 빨랐기 때문이다.

이후의 원전에 대한 광범위한 학습이 일반화되었고, 현실을 이론탐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론자체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다. 과학이론을 현실설명 도구로서, 비판의 전거로서 활용하지 않고, 변혁운동의 물질적인 힘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 단계에 와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된다. 이러한 자각은 결코 연구자들 내부의 논의의 귀결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실천 상에서의 극단적인 계급지상주의, 혹은 대중추수적 이론배격의 풍조가 다소간 극복되고 운동의 전략, 전술론의 기초가 되는 과학이론의 확립이 비로소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즉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의 필요성 및 그것이 갖는 의의는 운동이 발전이 제기한 당연한 요청이었던 것이다.

불론 이상과 같은 사상적 발전의 궤적이 학술운동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그것이 조직적 틀을 형성시킨 기반이 된 것도 아니다. 학술운동의 조직적 형식은 사상적, 이론적 논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자연

12) 초기에 주로 읽혀진 책은 Andre Gunder Frank, *Latin America Underdevelopment or Revolution* (Monthly Review Press, 1969) 등이었다.

발생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학술운동의 조직적 형식은 분과학별 연구자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자집단은 1980년 이후의 해직교수들과 대학원과정 에 진입한 진보적 연구자들이 자주 접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초기에는 연구실의 형태로 회합이 이루어지다가 1984년 7월 20일 한국산업사회 연구회 의 창립을 계기로 비로소 연구단체로 발족된다. 이후 역사학 분야에서 망원한 국사연구실(1984)과 역사문제연구소(1986), 한국근대사연구회(1987)가 (망원 한국사연구실과 한국근대사연구회는 최근 한국역사연구회로 통합되었다), 문 학부에서 문학예술연구회(1987)가, 철학부에서 사회철학연구실(1987)이 여성부에서 여성사연구회(1987)와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87)가, 커뮤니케 이션을 연구하는 한국사회언론연구회(1988)가, 정치학 분야에서 한국정치연구 회(1987)가, 농어촌사회의 문제를 조사, 연구하는 한국농어촌연구소(1988)가 창립되어 학문분야별 연구자단체가 속속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연구단체는 대부분 30전후의 소장연구자, 대학강사, 대학원생으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런 까닭에 제도권 학문사회의 외곽에 위치해 있다 는 점에서 공통된다. 흥미있는 것은 기존 학문사회의 분위기가 폐쇄적이고 체 제의존적(?)일수록 연구단체의 결성작업은 매우 힘든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고, 따라서 결성의 시기도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연구단체에는 아직 대학의 정식 교수 요원이 한명도 참가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이것을 통 해 보더라도 우리는 기존 학문사회의 재생산기제가 얼마나 보수적이며 폐쇄적 인가를 알 수 있다. 대학의 교수요원이 참가하더라도 대부분은 30대이며 40, 50대는 극히 드문 형편이다.

최근에는 정치·경제현실의 1차자료를 분석·정리하여 생산현장, 운동현장 과 밀착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취지로 하는 한국사회연구소(1988)가 창 립되기도 하였고,¹³⁾ 연구자 대중을 포괄하는 연구자대중 단체로서의 위상을 천 명하는 한국역사연구회(1988)¹⁴⁾가 결성되어 나가는 추세에 위상이 분화, 발전 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연구단체는 학회와 같은 성격, 연구 실의 성격, 연구소가 성격이 혼재된 상태에 있다. 단지 이들 연구단체는 모두 공동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을 수립하여 사회의 자주화와 민

13) 한국사회연구소, 「동향과 전망」 1 (태암, 1988)을 볼 것

14) 「한국역사연구회 회보 1」을 볼 것.

주화에 기여한다는 뚜렷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는 일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과 사회연구회(1987), 교육문제연구회, 공간환경연구회 등도 학술운동체로서 자기위상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학문의 대부분의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집단이 형성될 전망에 있고, 이들 모두는 기존의 학계를 향하여 매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과학문별 연구단체가 결성되는 중에 이미 그것이 갖는 조직적 한계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우선은 기존 학문이 갖는 신식민주의성, 체제긍정적 성격을 비판하고 대안으로서 민족적·민중적 학문을 지향한다고 할 때, 기존 학문의 재생산구도에 부응하여 구획지워진 분과학문별 경계선을 비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하는 점이였다. 대부분의 젊은 연구자들은 분과학문별 구획이 오히려 분과간 협동연구를 방해해 왔을 뿐더러, 분과 내의 기득권을 주장함으로써 허구적 전문가를 만들어 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분과학별 구획을 절대불변의 것으로 인정하고, 오직 학문자체의 변화만을 지향하는 연구단체라면 분과학문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단체는 실천적 지향과 연구성과의 대중화를 주장하는 만큼 현재의 학문사회의 구도를 전연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분야의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께 연구작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적 형식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편, 개별 연구단체로는 수행할 수 없는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연구자의 이익옹호와 초보적인 정치투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연대기구의 필요성이 이것과 더불어 제기되었다. 연구단체협의회의 건설의 논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연구단체가 자기재생산의 틀을 완비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일분야의 다양한 전공자들을 공동연구작업 속에 조직화 하고, 각 연구단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초보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상부조직단위를 건설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 애초부터 예측되었기 때문에 “학술단체들 간의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술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해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¹⁵⁾ 한다고 낮은 수준의 목표를 내세우는 연구단체협의회를 건설하기로 합의를 보고, 단체 대표들의 모임을 수 차례 거친다음 지난 11월 5일 정식으로 발족을 보았다. 이 협의회는 지난

15) ‘학술단체협의회 창립선언문’을 볼 것.

6월 한양대학에서 연구단체 공동준비로 개최된 학술심포지움의 성과를 정리하고, 그 심포지움 석상의 발언이 문제시되어 서관모교수가 소환당한 사건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연구단체대표들의 모임이 발전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연례적인 학술행사와 방학기간의 공동워크, 연구단체 간의 교류를 일차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밖에 대학원의 자치조직, 시간강사협의회, 평교수협의회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학술운동의 조직 범위 내에 포괄할 수 있으나, 현재는 제도권 외곽의 연구단체의 중심적 역할에 의해 이들이 통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 하에 있지 못하며,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운동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학술운동의 틀 내에 묶어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¹⁶⁾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연대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있다. 대학원은 수업,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타 연구자 집단에 비해 조직적 밀도가 높고,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따라서 몇몇 대학원에서 커리큘럼과 교수임용을 둘러싸고 교수들과의 마찰이 일어난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미 1980년 민주화국면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학생들의 ‘학풍개선을 위한 백서’를 제출하여 기성 학계와 첨예한 대립을 보인 바 있지만, 1987년에는 고려대 경제학과에서 커리큘럼 개정운동이 일어나 개량경제학 중심의 기초공통과목에 정치경제학원론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주류경제학 중심의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대학원생들의 이와같은 제도 개선투쟁은 서울대 정치학과 성균관대 사학과, 유학과 등에서도 발생하였는데 기성학계, 교수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장기화된 경우는 서울대 경제학과였다. 서울대 경제학과의 경우 정치경제학적 방법으로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전체 대학원생의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사논문의 40.7%와 박사논문의 83.3%(1985-1987)가 정치경제학 논문인데 비해 교수 중 정치경제학 전공자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었다.¹⁷⁾

이러한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대학원생들이 수업거부를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결국 정치경제학 전공교수를 채용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일단은

16) 각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지난 8월 3일 전국 시간강사협의회를 창립하여 대학교육의 민주화와 학문의 발전, 강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신문도 발행하고 있다.

17) 장상환, 윗글.

매듭을 지었다.

대학원 바깥에서도 연구자들의 집단행동은 심심찮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공권력이 기존 이데올로기 지형의 침범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자세때문에 대부분이 유발되었고, 아직까지 학자, 연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 경우는 드물었고 출판운동에 대한 탄압을 통해 우회적으로 조여오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1987년 「한국 민중사 I, II」의 출판을 문제삼아 출판인을 구속하고 집필자를 수배한 것에 대하여 많은 역사연구자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저명한 학자들이 법정에서 변론을 맡은 사건도 이것의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서관모 교수의 소환사건에 대항한 연구자들의 집단적인 대처, 최근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청문에서의 참여, 북한관계 서적을 출판한 이유로 구속된 출판인의 석방을 위한 서명작업 등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집단행동의 경험이 축적되어 가고있다.

이상과 같이 학술운동의 사상적, 조직적, 투쟁상의 발전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발전과정은 상대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하나의 구심점을 향해서 진행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에는 다소의 이론도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 막 탄생된 학술단체협의회가 지금까지의 사상적, 조직적, 투쟁적 성과들을 상당부분 흡수해 가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학술운동의 발전적 전개와 초기의 역사로서 기록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진행중인 현대사회연구소의 연구원들의 파업 농성과 정신문화연구원 내부의 진통, 대학의 시간강사노조(협의회)의 활동도 학술운동과 동일한 투쟁적 과제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을 모두 담을 조직적 틀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연대의 통로를 통해서 서로의 힘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학술운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

학술연구자가 일상적 연구작업을 운동적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뼈대부르조아적 개인주의와 무규율성을 다소간 극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극히 미미한 성과물을 획득하고, 주어진 현실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원의 조직적 단결과 개별성의 극복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

는 개별, 분산, 고립된 존재로서 일상적인 활동공간을 서로 간에 공유하지 않으므로(물론 연구소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작업에 있어서 개별적 성격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와같은 존재조건 때문에 연구자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의 규율에 적응하지 못할 뿐더러 거부감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연구자들을 운동적 과제 속에 묶어 세우고 조직의 규율속에 복무하도록 해야만(이 규율의 강도는 매우 낮은 것이지만) 학술운동은 운동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태는 소수의 활동적인 연구자(이들은 연재 공동연구팀의 조직자, 연구회의 간사, 부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과제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후자를 적극적인 참여자로 견인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학자,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견지하고 있는 아카데미즘, 학술주의, 소재주의의 경향을 불식시키고 이들을 보다 실천지향적인 연구자로 변화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현실을 보다 완벽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데 주된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학문적 자기완결성을 강하게 고집하고 있다. 이들은 살아 움직이는 현실을 여전히 대상으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스스로를 초연한 관찰자의 지위에 묶어두려 한다. 이들은 성급한 판단, 무리한 결론, 조급한 실천에 대해 몹시 두려워 하면서 이론의 완결만이 실천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실천과 이론과의 상호관련성, 혹은 실천의 우위성에 대해서는 말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운동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제들을 연구의 소재로 삼고 철저히 연구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연구자가 제 몫을 다하는 것이라는 그릇된 신념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단적 작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해 회의를 표명하면서 책상만이 자신의 유일한 실천공간이라 믿고 있다. 다소 진보적 성향을 갖는 연구자들도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의 개인적인 연구역량이 학술운동의 발전에 공한한 것도 사실이나 대부분의 성과물이 자기자신에게만 귀속되었고 집단적 성과로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의 발전에 오히려 저해적인 측면도 다분히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¹⁸⁾

18) 지식인으로서 연구자가 갖는 특성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줄고, “학문운동론”, 「산업사회연구 2」(한국산업사회연구회, 1987)을 볼 것.

이상과 같이 연구자들 개인의 품성과 태도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고안도 역시 해결과제로 제기된다. 즉, 실천적 제운동과 다소 격리되어 존재하는 연구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현실사회가 제기하는 제과제들을 포착할 수 있으며, 만들어 낸 과학이론을 어떠한 통로로 검증하느냐하는 것이다. 즉, 학술운동권에서 창출해 낸 이론이 민족적·민중적 성격을 지닌다는 담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충분한 답변을 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장운동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접촉, 연구단체 내의 담화의 틀의 활성화를 통해서 상당부분의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문제는 현재의 학술운동이 다양한 실천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방도를 모색해 나가고,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은 여타 부문운동, 특히 문화, 이데올로기 제 영역에 속한 운동(문화운동, 교사운동, 과학기술자운동 등)과의 유대를 어떻게 획득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기층의 민중운동 및 정치운동과는 어떻게 연결고리를 확보해 나갈까 하는 과제가 있다. 최근 문화 각 부문의 진보적 문화, 예술인들을 포함하는 '한국 민중예술인총연합'을 결성한 바 있는데, 이것은 이 방면 종사자들의 통일전선적 조직으로서 커다란 사회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연구자들은 아직 진보적 연구자를 망라하는 통일전선적 연구자조직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결여하고 있으며, 학술단체협의회조차 몇개 단체를 포괄하는 '협의체'에 불과한 실정인어서 진보적 연구자 모두를 포괄하는 대중조직으로서의 성격과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타 운동과의 조직적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현재의 조건과 역량을 다소 앞지른 감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 현실은 교사운동과 학술운동과의 연대, 문화운동과 학술운동의 연대, 과학기술자운동과의 연대를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정부의 출판탄압에 관한 사례만 생각해 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집필자, 번역자인 연구자들에 대한 우회적인 사실상의 탄압이기 때문에 연구자들도 학문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교육을 통해서 저배이데올로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은 '교과의 내용'과는 별개의 것인양 자처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이데올로기 제 부문운동과 낮은 수준의 연대의 기반이라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현단계에서도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술운동의 물적기반과 근거지를 확보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대학과 정부산하 연구기관을 제외하고는 연구자들이 생계를 해결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즉, 민간연구단체가 자생력을 갖고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제도권외곽의 연구자들은 생계비에 미달하는 강사료와 번역·집필의 원고료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즉, 출판사가 이들의 생계근거지 역할을 해 준 것이다. 그러나, 출판사 또는 매우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므로 충분한 원고료를 제공해 줄 수 없고 그나마 상업주의적 편집기획에 의거하여 이들의 지식노동을 구매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자신의 성과물을 의도대로 출판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뿐더러 상업주의의 논리에 종속당할 위험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분산된 연구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의 기반을 확보해줄 수 있는 연구소의 설립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결국 앞으로의 학술운동은 이러한 연구근거지를 축으로 하여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민간연구소를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기금마련, 연구원확보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학술운동의 전망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성과물을 통해서 사회현실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다. 현단계 한국사회의 지적 문화적 토양은 지극히 천박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비판이전에 창조·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이론의 당파성을 고집하기전에 이론의 논리성을 획득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분명히 타당하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타당한 공식 이상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 우리는 앞서 현실속에서 문제의식을 공급받고, 창출된 이론을 현실로 되돌려 주는 것이 학술운동론 제기의 기저의 문제의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때의 현실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현실의 실상에 대한 구체적 파악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구성과물, 논리적 정합성을 갖춘 이론은 스스로 현실에 대해 무엇인가 말해준다는 착각 속에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말해주는 것이 없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의 성과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야기 하기 전에 연구활동이 부진했던 객관적인 배경, 현재 연구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기존의 연구활동의 재생산통로, 진정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 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성실한 연구자라면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고 본다. 학술운동이 존립해야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서 추상적으로 연구성과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더러 아무런 생산적인 결과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연구활동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구조적 제 모순이 철폐되지 않는 한 학술운동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저런 형태로 제도권 외곽의 연구자들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그들의 집단적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학술운동이 운동으로서의 꼴을 막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타의 민중운동이나 지식인운동에 비해 그 조직적 결속력과 투쟁의 열기도 지극히 낮은 상태에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민족적, 민중적 현실에 눈을 뜨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높여나갈때 학술운동은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을 향한 도상에서 커다란 밑바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